

종합·해설



1일 오전 국회 정보위 위원장실에서 최병국 위원장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野 “국방장관·해참총장 해임해야”

與 “先구조… 인책론은 정치 공세”

■ 여야 천안함 긴급현안질의 앞두고 신경전

국회 정보위, 6일 국정원 보고 청취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지방선거 판도를 좌우할 중대 정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천안함 실종자 구조 및 인양작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다 폭발 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1일 민주당은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인 책론을 내세우며 전방위 공세에 들어갔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실종자 구조에서 진상 규모 단계로 옮겨감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내에는 천안함 사고의 최종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실종자의 생사여부가 확인되면 인책론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은폐 의혹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이른바 ‘비밀주의’가 국민적인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재차 진상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 회의에서 ‘천안함 교신내용을 공개하고 생존자 격리 수용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긴급현안질의에 이종걸, 전병현, 문학진 의원을 배치하고 ‘은폐 의혹’을 집중 주제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사태가 ‘북풍(北風)’으로 번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이번 천안함 침몰 사태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 보수층 결집으로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물론 국군 기무사령관·정보사령관의 출석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인책론’에

대해 부적절한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구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침몰 사고의 원인 규명, 생존자 수색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군 지휘부에 대해 지금은 책임론을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책임론이 조기에 확산되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정동근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의 진상은 밝혀져야 하고 책임 규명도 따라야 하지만 생존자 구조만족 혼각을 다투지는 않는다”며 ‘선(先)구조 후(後) 진상조사’의 입장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오는 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여부 등을 정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물론 국군 기무사령관·정보사령관의 출석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인책론’에

금산공인증개사

T.081-5668 H.011-5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빌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00평 분할 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 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생명/상기/오피스/유통기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철량면 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 특징
- 주유건축사실 허가 특
- 도로점용 허가 특
- 대량에서 광주상행 첫주유소부지
- 2010년 9월 완공 철량농공단지 앞
유일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창고부지 (서광주역 2순환도로변)

■ 창고부지 약 2600㎡(창고 490㎡)
대지
약 950㎡
■ 매매가: 22억(조정가)
■ 대지 창고 분할 매매 가능
■ 물류 창고부지로 최적지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 위치 ●

화순군 전대면 대민리 20번
광주에서 10분 거리 8.3km선으로 화장품사
도보로 전대병원 편의시설 이용 가능
만연한 무분산 지역에 위치하여 들판, 산책로
로 이루어져 편리하고 공기좋고 평안한 전원생활
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환로 출입문을 10분 사용하고
슬iding door, 온도조절이 뛰어나며 수면후
민원피로 희박 이후 좋고 수면이 어렵거나
건강에 악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퇴직자 척척합니다.

■ 위치 ■

■ 대지: 250평 · 건평: 73평
■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 주차 고급 자동문 사용
차량 2대 가능
■ 최신 cctv 8대 설치
■ 방 4개/욕실 3개
■ 난방시설: 심야전기
■ 조경: 전자, 소나무
■ 건축 준공: 2009년 10월 30일
■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고야 슬라브, 한옥 전통기와
■ 외부 구조 최고급 수입 대리석 시공
■ 실내 인테리어
플로토 벽돌, 화강암 바닥
판백니무, 소나무 미송
■ 2층 방기루 테리스 12평
(판백니무, 스크립 시공)

● 주인적거래 ●

■ 주인적거래 ■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011-634-4114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화장, 확정)

길잡이공인증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토론회 패널 4명중 1명 광주 인사로

■ 민주 광주시장 배심원제 경선 를

패널에게도 투표권 인정… 총 404명 당원전수 여론조사 3개 기관서 실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4명의 패널 중 1명을 현지인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들 4명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또 경선의 50%를 차지하는 당원전수 여론조사는 3개 기관이 적합도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민주당 중앙당 공심원에 최재성 간사는 1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강운태·이용섭 의원과 정동재 예비후보 등 광주시장 경선 후보 대리인 3명이 참가한 브리핑에서 경선세부 규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모임은 최 간사가 경선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했고 이어 후보자 대리인의 질문과 이의제기�이 어졌으나 후보자 측의 요구가 대부분 무시돼 중앙당의 횡포가 심하다는 후보자 측의 불평을 삼았다.

◇시민공천배심원제(50%)=최 간

사는 광주에 적용되는 배심원제를

‘동합형 시민공천배심원제’로 규정하

고 1인 1표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 투표 전에 실시되는 후보 검증 토론회는 시민배심원 대표자 선서→후보자 영상 소개 및 연설→공통 질의 및 답변→후보 간 상호토론→신상 및 종합토론→배심원 서면질의→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사회자 1명과 패널 4명이 참여하고 이를 패널에게도 투표권이 인정돼 배심원단 투표권 보유자는 404명이 된다. 패널 4명 중 1명은 광주 지역 인사로 배정되지만 중앙당에서 미리 대상자 풀(pool)로 3명을 후보자에게 고지한 뒤 후보자에게 1명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지 배심원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배심원 경선 24시간 전까지 무작위 출석 200명을 뽑되 지역 ± 10%, 성별 ± 12.5%, 연령 ± 12.5%의 편차는 인정하기로 했다.

배심원은 직접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신청을 통해 서면 질문의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당 2개씩 할당된다.

■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절차

〈시민공천배심원제(50%) + 당원 전수조사(50%)〉

시민배심원대회(후보검증 토론회)

↓

투표 및 개표(전자투표시스템)

↓

당원전수조사 결과 공표

↓

배심원 득표율과 당원전수조사 합산

↓

최종 결과 발표

↓

〈당선인 결정 방법〉

① 출석 시민배심원단의 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

② 각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후보자 지지율 100% 기준)를 합산하여 평균값 산출함

③ ①, ②를 합산하여 최종 득표를 산출함

(①+②)/2

◇당원전수조사(50%)=전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중앙당 선관위가 선정한 A급 7개 여론조사기관 중 후보 대리인이 주첨점한 3개 기관이 나눠서 실시한다.

중앙당은 또 당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전체 당원에 대해 1번씩만 전화 조사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설문은 ▲ 본인 확인 ▲ 당원 여부 확인 ▲ 적합도 조사 순으로 하기로 했다.

설문은 구체적으로 본인 및 당원 여부를 확인한 뒤 “000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는 (경력 2기자)를 지난 △△△씨(3명) 중 누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 중 후보자 소개와 보기는 순회식으로 이뤄지며 적합도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을 때는 한 번에 거쳐 재질문이 시도된다.

한편, 당선인 결정은 ① 출석 시민 배심원단 투표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현지, 전문으로 나눠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② 3개 여론조사기관의 당원전수조사 결과(후보자 지지율 100% 기준)를 합산하여 평균값 산출→③ ①, ②를 합산, 최종 득표를 산출(①+②)/2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광태시장 “특정후보 지지 없다”



과 관련, 특정인을 지지하는 ‘박삼’은 없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선거 입지자 환경정책 반영

‘광주환경네트워크’ 구성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지역 6개 환경단체는 1일 “6·2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올바른 환경정책을 반영·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정책 특별기구인 ‘광주환경정책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참여단체는 광주·전남 녹색연합을 비롯,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녹색교통운동, 시민생활환경회의이다. 또 시민단체 밝은세상과 광주경실련이 협력단체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1일, 일부 후보들이 ‘박광태 시장의 조직이 가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선거사무실이나 조직을 갖추고 선거운동을 한 일이 있는데 조직이 가세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정인 지지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일, 일부 후보들이 ‘박광태 시장의 조직이 가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선거사무실이나 조직을 갖추고 선거운동을 한 일이 있는데 조직이 가세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정인 지지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